

보도시점 (온라인) 2024. 4. 29.(월) 12:00
(지 면) 2024. 4. 30.(화) 조간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 개발로 로봇배송부터 주차문제 해결까지

-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충남 보령, 전남 무안, 인천 중구, 충북 청주·음성 5곳 최종 선정

오랜만에 가족 해외여행으로 공항에 가야 하는 ㄱ씨, 지난해 해외 출장때 공항 실내주차장에서 주차에 시간이 너무 걸려 비행기를 놓칠뻔한 기억에 일찍 서둘러야 한다고 가족들을 보챘다. 이때 막내 딸이 공항갈 때 필수 아이템이라며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주차면 수와 위치를 안내하는 주차 내비게이션 앱을 알려주었다.

주차내비게이션을 설치한 ㄱ씨, 공항 인근에 도착하니 앱이 실내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주차면 수를 알려주었고, 실내주차장으로 진입하니 가장 가까운 빈 주차면까지 경로를 안내받아 쉽게 주차할 수 있었다.

ㄱ씨는 공항뿐만 아니라 병원, 대형마트 등 혼잡한 주차장에서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 지금까지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 주차장 입구까지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면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주차장의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및 주차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이다.

□ 주소정보와 미래 신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 드론배송, 자율주행로봇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실내내비게이션 등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지자체 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지자체는 3월(3.11.~3.29.)에 시행된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51건을 응모하여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활용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 1차 서면심사: 4. 4.(목), 2차 발표심사: 4. 19.(금)

□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5곳에는 총 8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확산모델 실증,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증,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추진된다.

○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은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섬 지역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을 자율주행로봇이 가가호호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모델로 충남 보령시가 선정되었다.

○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확산모델 실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구축하고 있는 입체주소정보*를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하여 활용하는 서비스 확산모델로 전남 무안군이 선정되었다.

* 입체도로(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 실내이동경로 등

○ 도시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인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은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 2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을 융·복합하여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및 주차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모델로, 2025년부터 전국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사업 제안으로 충북 음성에서 제출한 '도로명 주소 메타버스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와 융·복합한 미래 산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1개 사업에 약 74억 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 먼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촘촘한 주소체계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하도로, 내부도로 등에도 주소체계를 도입함으로써 2차원 평면주소를 3차원 입체개념의 주소정보로 고도화했다.

- 이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1. 6. 9.)에 반영하여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 아울러 하루에 몇 회 없는 배편에 수시로 끊기는 섬마을이나 폭설, 폭우로 인해 물류체계가 취약해지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구축을 통한 배송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 '23. 12. 기준 전국 10개 시도 472개 드론배달점에 사물주소 부여

○ 2023년에는 주소기반 로봇배달점을 활용한 대학교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을 500회가량 진행하면서 비대면, 저렴한 배달료 등으로 이용객들의 큰 호응 속에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 올해부터는 실효성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차량용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소정보를 확충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서비스모델을 적극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담당자	사무관	홍성대	(044-205-3580)



참고1

'23년 주요 시범사업 실증 사진

□ 주소기반 드론 배송(충남 보령시)



드론 배달점에서 대기중인 드론



배송된 물품을 받는 이용객

□ 주소기반 로봇 배송(서울 광진구, 경기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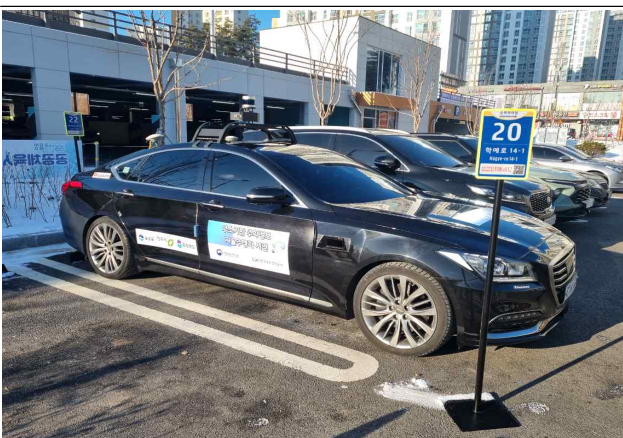


배달 후 대기장으로 돌아가는 자율주행로봇



공원에서 순찰중인 자율주행로봇

□ 주소기반 자율주행차 주차(충북 음성군, 전남 무안군)



승하차지점에서 대기중인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주차 시연회 중계화면